

제 3 절 국제협력

1. 정보통신산업의 외자유치

가. 외국인투자 필요성 및 현황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규제완화, 기술개발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함께 해외 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선진 경영기법과 첨단기술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통신사업의 경쟁이 확대된 1994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통신 사업관련 외국인 투자제도가 정비되는 금년 하반기까지 상당한 규모의 외자유치가 전망된다

〈표 V-3-101〉 정보통신시장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백만불)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정보통신서비스	03	101	7	18	154
정보통신기기	4	19	114	36	200
S/W	5	6	16	10	37
계	93	126	137	64	391

나. 외국인투자 촉진정책

1) 외국인투자 여건 개선

정보통신부는 98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유선 10%, 무선 33%로 되어있는 통신사업자의 동일인지분 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고, 외국인 최대주주도 99년부터 허용하기로 하였다 한국통신은 외국인들이 투자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기간통신사업자인데, 20%로 되어있던 외국인 지분한도를 33%로 확대하였다 또한, 한국통신의 해외DR발행과 외국통신사업자와의 전략적제휴를 통한 외자유치도 98년 하반기중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현행 33%에서 49%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외국인이 한국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여 온 정책을 바꿔 내년

부터 외국인도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허용하여 외국인도 통신사업 전반에 걸쳐 경영권을 확보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동안 엄격히 규제되어 왔던 기간통신사업자의 M&A도 공정경쟁 질서유지와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공공정보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업체와 외국업체의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 외국인 투자 촉진은 물론 국내 업계의 구조조정 지원, 정보통신 분야 국제경쟁력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표 V-3-102〉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한도

구 분		유 선	무 선	한국통신	
~1997		동일인	105	33%	1%
		외국인	0%	33%	0%
WTO기본 통신협상	1998~2000	동일인	10%	33%	3%
		외국인	33%	33%	20%
	2001~	동일인	10%	33%	3%
		외국인	49%	49%	33%
1998년 법 개정	1998법 공포일~ 1991 1 1~	동일인	제한폐지	제한폐지	10~15%
		외국인	49%	49%	33%

※ 1999년부터 외국인 대주주 허용 (한국통신은 금지)

※ 한국통신 동일인 지분제한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 한도 33% 확대는 1998 9월부터 시행하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한도 49% 확대는 정기국회에 재상정할 방침

2)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강화

정부는 국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98 7월에 주한 외국공관 및 외국인기업 관계자를 정보통신부로 초청하여 정보통신분야 투자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98 8월에는 싱가포르 투자유치단 파견 시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투자설명을 통해 현지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EU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일본지역으로부터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98 10월에는 일본에서 정보통신분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정보통신분야 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외국인투자 종합안내 DB를 구축하여 정보통신 유망 투자대상기업, 정보통신법령, 정보통신 투자유치정책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업간의 투자협회가 가시적인 투자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촉진

가. 정보통신산업 수출현황 및 전망

정보통신산업은 1990년 이래 우리 경제의 수출을 주도해온 전략산업으로 1997년의 경우 전체 무역수지가 85억불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분야는 수출 313억불, 수입 219억불로 무역 94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 향후에도 정보통신산업은 1998년 139억불, 2002년 340억불의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무역흑자가 확대되어 IMF체제를 극복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V-3-201〉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현황 및 전망

(단위: 억불)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98-2020 평균성장률
정보통신 산업	수 출	317	296	313	370	439	511	597	702	17.3%
	수 입	167	196	219	231	253	280	318	362	11.9%
	무역수지	150	100	94	139	186	231	279	340	24.9%
정보통신 산업(반도체 체제외시)	수 출	96	117	138	174	213	255	298	352	19.2%
	수 입	76	91	90	89	97	108	121	135	11.0%
	무역수지	20	26	48	85	116	147	177	217	26.2%

주) 1996~1997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1998년 이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예측치

이처럼 IMF체제 극복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 무역수지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수출촉진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산업 수출촉진 대책

1) 추진방향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환율상승효과를 활용하여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 국산제품의 홍보활동, 업체의 해외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 장기적으로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수출경쟁력확보를 위해 수출관련 자금, 기술, 인력 및 정보 지원 강화 등 수출의 기반이 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 수출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채신금융자금을 활용한 정보통신업체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체의 수출, 합작공장 및 해외투자시 채신금융자금 지원(1997~1999년 . 1조원), 통신서비스 및 S/W의 수출보험 적용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S/W 공제사업을 통한 자금지원(1998년 운용규모 300억원)으로 인해 S/W 수출계약서를 담보로 한 자금대출, 국제 S/W 계약시 이행보증 등에 1998년 6월까지 1,360억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연불금융 및 Project Financing 확대지원을 위해 정보통신부, 수출금융기관, 정보통신산업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정보통신산업 「수출금융지원협의회」의 운영을 강화하여 다양한 수출 금융 보험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3) 수출전략품목 집중 육성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상품개발이 가능하며 국제적 경쟁력이 있고 시장수요 확대가 예측되는 주요품목을 10대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다 전략품목으로는 CDMA 단말기, 고속모뎀, ADSL (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등이 유력하며, 이들 품목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대책을 1998년 8월까지 수립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품목으로 육성시킬 방침이다

4) 유망기술 및 핵심부품의 조기 국산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현재 우리나라는 CDMA 단말기 등 주요 수출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하지 않아 수출대금의 상당 부분이 원천기술료로 지급되고 있고 환율상승으로 인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요 부품의 조기 국산화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용 핵심 칩, 광통신 소자, 2차전지 등의 핵심부품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큰 전략품목을 발굴, 1998년의 경우 44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V-3-202〉

CDMA 단말기 국산화 목표

구 분	1997년 현재	1998년	2000년
국산화율	30%	55%	75%
대상부품	PCB, RAM	CDMA 핵심 칩	SAW 필터 듀플렉스등 RF 부품, 2차전지

5) 국산제품의 홍보 강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시 경쟁사는 AT&T, 지멘스 등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군 및 대만 등의 신흥공업국가로서 이들에 비해 국내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산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해외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여에 1998년의 경우 2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거래 알선 시스템(KOTRA), 중소기업 상설 전시관(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 기술정보센터(ETRI) 등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통신 제품 및 기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표 V-3-203〉 정보통신 주요 품목의 브랜드 이미지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대 만	
정보기기	PC(데스크탑)	100	115	110
	노트북 PC	100	120	110
	모니터	100	120	110
	CD-ROM 드라이브	100	110	100
	HDD	100	115	120(싱가폴)
통신기기	코드레스폰	100	120	95
	FAX	100	194	84
	이동전화기	100	120	130(미국)
	위성방송수신기	100	-	99

3.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강화

가.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 현황 및 지원활동

지금까지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은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1991년 540만달러의 TDx 교환기를 필리핀에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통신서비스사업, 통신망 건설, 합작공장 설립, CDMA, S/W 등으로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업체와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업체 간에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국산 전자교환기(TDX)는 1997년말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동구·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 26개국에 369만 회선, 약 8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된 CDMA 방식의 이동전화 관련제품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러시아·미국·홍콩·페루·중국 등에 7억 2,300만 달러의 장비 및 단말기 수출을 계약하였다. 또한 시장 잠재력이 큰 중국·미국 중남미 시장에 대해 국내 통신서비스업체 및 장비제조업체들이 CDMA 통신서비스사업 참여와 CDMA 시스템 및 단말기 수출을 추진중이다.

한편 필리핀·칠레·인도 등 22개 국가의 통신서비스사업 지분참여를 위하여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

및 장비제조업체가 총 11억 1,361만달러를 투자했거나 추진중이며, 최근에는 브라질·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이동전화, GMPCS, 전화서비스 등의 통신서비스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신업체들이 EDCF자금 또는 자체자금으로 베트남 스리랑카·니과리아 등 3개국에 1993년에서 1997년까지 총 4억 4,363만달러 규모의 통신망 건설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추진중이다. 또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중국 루마니아 등 12개국에 국내업체들이 총 8,400만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계약을 체결하여 전자교환기 광케이블 등 통신장비 합작공장을 설립하였거나 추진중이다. S/W산업의 경우는 1995년에 일본 미국 중국 등을 대상으로 1,600만달러 규모의 S/W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1997년까지 총 1억 2,000만달러를 수출하였고 1998년에도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V-3-301〉

정보통신산업의 연도별 해외진출 현황

(단위 천달러)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통신 서비스	-	-	8,230	222,110	180,649	333,989	368,629	1,113,607
통신망 건설	-	-	29,630	-	136,580	223,380	54,039	443,629
합작공장 설립	1,850	3,510	34,860	6,010	7,974	25,720	4,000	83,964
TDX 수출	5,210	26,416	26,855	25,734	157,235	379,122	186,679	807,251
CDMA 수출	-	-	-	-	1,521	603,466	118,092	723,079
S / W 수출	-	-	-	-	16,720	21,500	81,376	119,596
계	7,060	29,566	99,575	253,894	500,679	1,587,177	812,815	3,291,126

주) CDMA 수출은 계약기준(1996년 미국에 CDMA 단말기 6억달러 계약)

나. 정부차원의 대외협력활동 강화

정부는 우리 업체의 해외진출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통신장관회담을 확대 추진하고, 멕시코·베트남 튀니지 등 새로이 협력관계가 증대되고 있는 국가와도 통신협력위원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진출대상국의 고위인사 초청과 우리측 고위인사의 상대국 방문, 민·관 합동사절단 파견사업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1) 통신장관회담

한 중 통신장관회담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의 정보통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업체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 7월에 시작되었는데, 1998년 9월에는 북경에서 제6차 한·중 장관회담을 개최하여 IMT-2000 공동연구협력, ATM 교환기 공동개발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하였다

1998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 통신장관회담에서는 한국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가상현실, 3차원 영상기술 등 선진기술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민간차원의 교류 활성화와 기술연구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외에 양국 장관은 한·일 APII Test-bed 공동실험, 초고속 위성통신 공동실험, 양국간 전자상거래 국제상호접속실험 등 고도 정보통신 기반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초고속 위성통신기술, 초고선명영상(UHDTV) 기술, 3차원영상(3DTV) 기술 등의 차세대 신기술을 이용하여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영상전송하는 방안에 대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디지털 HDTV방송기술협력을 위하여 민·관 기술협의회를 구성하고, 양국간 방송프로그램 전송실시와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일본 국책연구기관인 통신종합연구소간의 기술협력서도 체결하였다.

1998년 6월에는 제1회 한-베트남 통신장관회담이 개최되어 양국간 정보통신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회담에서 베트남 장관이 CDMA 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를 베트남에 도입할 방침임을 확인하였고, 우리측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 CDMA 기술을 베트남에 전수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베트남 측은 한국통신이 하이퐁, 광빈 등 4개 지역에서 추진한 통신망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다른 지역에도 참여해 줄 것과 WLL, ATM교환기 등 차세대 통신시스템의 시범사업에도 한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통신협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협력각서체결 확대

통신협력위원회는 현재 9개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분야의 현안을 다루고 협력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왔는데, 1998년 하반기에는 영국, 일본, 루마니아, 싱가포르 등과 통신협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현안이 있는 해외진출 전략국가를 대상으로 개최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의 해외진출 대상국가와 정부간 통신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통신협력각서가 1997년 8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체결됨으로써, 통신협력각서 체결국이 14개국으로 확대되었는데, 향후 CIS 주요국 및 동남아, 중남미 등 해외진출 주요 대상국을 중심으로 협력각서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 해외 정보통신시장 적극 개척

1)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정보통신부에서는 국내업체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산·학·연 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6년 11월부터 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에는 총 1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주요 의제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지역의 정보통신

시장진출 지원방안, S/W와 CDMA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OECD가입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EDCF 지원방향,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대책 등이었다. 1998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전략상품인 TDx, CDMA를 비롯하여 S/W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연불수출금융 확대, 채신금융자금을 활용한 수출기업지원, 통신분야에 대한 EDCF자금 확대, 수출보험 이용 활성화 등 금융 및 보험 지원방안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 및 투자정보 제공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2) CDMA 시장개척단 파견

1997년에는 2차례에 걸쳐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3개국과 인도네시아·필리핀·오스트레일리아·싱가폴 등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사절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CDMA 이동통신 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업체의 현지시장 진출을 모색하였다.

3) 해외진출 선행사업의 확대·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한국통신·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의 개발도상국 기술인력 초청 훈련사업과 우리나라의 기술인력 현지 파견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보통신관련 연구소에 진출대상국의 연구인력을 초청하여 기술훈련 및 공동연구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1997년에는 베트남 정보화 정책연수와 싱가포르 정보통신관리 연수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1998년부터는 해외진출 전략국가의 정책 및 기술분야 정보통신인력 국내초청연수와 APT연구방문프로그램을 활용한 APT회원국 정보통신인력 국내 초청훈련 및 한국의 통신시설 견학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4) 해외진출 금융 및 보험지원 확대

1997년에는 유효기간제 도입, 사업타당성 보고서 제출 완화 등 EDCF 지원절차 및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수출보험지원에 있어서도 S/W, 통신서비스, SI 등 용역수출에 대한 수출보험인수와 유망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인수 등 그 지원의 폭을 확대시켰다.

1998년에는 관세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부문의 EDCF 차관 및 KOICA의 무상 원조를 확대하고 수출보험, 연불금융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IMF체제 하에서 자금난에 처해있는 국내기업들에게 채신보험기금의 은행 예탁을 통하여 해외진출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4. 정보통신분야 통상현안에 능동적 대응

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논의에 적극 대응

미국은 자국의 정보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및 관련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특히 1997년 7월 클린턴 대통령이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을 공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관련된 국제규범을 도출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추진할 계획임을 천명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5개의 기본원칙과 국제적 합의 및 협약이 필요한 9개 분야, ① 즉 관세 및 조세 ② 전자지불 시스템 ③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일 상업코드 ④ 지적재산권보호 ⑤ 사생활보호 ⑥ 보안성 ⑦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기술 ⑧ 내용물규제 ⑨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관세 및 조세’ 문제로, 이는 S/W, 영화, 음악 등 인터넷을 통해 직접 거래될 수 있는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무관세화를 추진해야 하며 신규조세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1998년 5월에 일본과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컴퓨터 및 영상 S/W 거래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미국은 이같은 국제적 합의를 타국으로 더욱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무관세화를 WTO의 공식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며, OECD, APEC 등에서도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1998년까지 무관세화, 통일상업규범, 기술표준 등에 대해서 국제적 합의를 이루고, 2000년까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자간 협정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인터넷 구축에 필요한 관련 설비도 2000년까지 무관세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기술 관세협정 (ITA-II)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이 인터넷 상거래의 무관세화를 비롯하여 전자상거래 국제질서를 주도하려는 것은 국제무역의 새로운 패턴으로 급격히 부상중이며 조만간 기존의 국제상거래 방식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 음악, 영상 소프트 등 디지털 제품의 거래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국제품을 전세계 시장에 아무런 관세장벽없이 판매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인터넷 상거래의 통일규범 작성을 민간기업에 이양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각국 정부의 규제를 배제시키면서 이미 인터넷 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는 EU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1997년 4월에는 “유럽의 전자상거래 전략 (A European Initiative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여 2000년까지 추진해야 할 4개 핵심분야를 제시하였다 또한 1997년 10월에는 브뤼셀에서 유럽, 아시아, 미주지역의 업체 및 국제기구 등이 참가한 “21세기를 대비한 세계 정보사회 건설”이라는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 전자상거래 관련 동향, 국제규범 및 국내법 제정, 업계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일본은 정보기술의 우수성,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산업의 발달 등을 토대로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 활

성화 및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고 정보기술제품 및 S/W 등에 대해서는 이미 관세를 철폐한 상태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인터넷 상거래 확대라는 대세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입장표명 보다는 국제적 논의동향을 관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상거래의 무관세화와 같은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는 새로운 무역패턴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의하에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관세부와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서는 여타 국가들의 반응과 향후 기술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주요쟁점에 대해 중요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되는 OECD 전자상거래 각료회의에 정보통신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와 입장이 비슷한 국가들과 공동 대응함으로써, 다자적 차원에서 국제적 합의를 모색하고 미국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나. 정보기술 확장협상(ITA - II)

정보기술협정(ITA - I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 I)이 1996년 12월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되고 구체적 대상품목 및 개발도상국 유예조치가 1997년 4월 최종 타결되었다 ITA - I은 한국, 미국, 일본, EC 등을 포함한 세계 43개 국가들이 참여하여 컴퓨터 H/W · S/W 반도체 · 통신기기, 기타 관련부품 등 203개 품목의 관세를 1997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하, 2000년 1월 완전 철폐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자유화협정이다

ITA - I 협상타결시 합의사항 중에는 대상품목 확대, 기존 품목 관세철폐 조기시행 등을 위한 추가협상(ITA - II)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1998년 초부터 ITA - II 협상이 개시되어 1998년 5월말까지 각국이 제시한 ITA - II 대상품목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181개 품목의 의장리스트가 마련되었다 ITA - II협상은 당초 6월말을 기한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가전제품의 IT적합성 여부를 둘러싼 동남아 국가군과 EU의 첩예한 대립 등으로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9월중 참가국가간의 협의를 통해 ITA - II협상 재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동 협상에서 우리나라 경쟁우위 품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 한 · 미 통신협약

한 미 통신협상은 미국이 한국정부의 국산품 우선구매정책 등으로 미국기업의 한국통신시장에 대한 유효한 접근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96 7월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PFC · Priority For-

eign Country)으로 지정함에 따라 시작되어 그동안 약 1년간 협상을 진행한 끝에 지난 '97 6월 5차 협상에서 최종타결하게 되었다

미국정부의 요구는 '민간기업 장비구매에 대한 정부불간섭 보장' 등을 골자로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었으나, 우리 정부는 '민간기업은 오직 자신의 상업적 고려에 의해서만 통신장비를 구매하고 있으며, 우리정부는 민간기업의 이러한 장비구매활동에 간여하고 있지 않다'는 논거로 미측의 협정체결요구를 거절하는 한편, 미측의 요구중 합리적 부분은 우리의 제도개선 차원에서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우리나라의 현행제도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미측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협정 체결없이 현안을 타결하였다

한·미 통신협상 타결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 미측의 '신규협정체결' 요구에 대해 당초 우리입장인 정책발표 방식을 관철시켰다는데 있다 즉, 정보통신부회보에 게재하는 정책발표문은 통상협정(Trade Agreement)이 아닌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조치'이므로 우리가 미측에 새로이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정책발표문의 내용도 대부분 국제협정이나 국내 법령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미 통신협상의 타결로 우리가 새로이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업체들이 한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정부가 국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통신업체로 하여금 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책발표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되었다는 것이다

라. 한·카 통신협의

1997년 1월 10일 장 크레티앙 캐나다 수상의 방한시 양국은 통신장비 형식승인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정보통신기기 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위한 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양국은 쟁점사항인 협정적용대상기관, 대상품목, 조달절차 등에 대하여 상호 입장이 대립되어 협정체결이 지연되어 왔으나, 1998년 7월 제4차 통신협약에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약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되어 온 양국간 통신장비조달협상을 마무리하였다. 그동안 캐나다측은 양허대상기관으로 한국통신 이외에 한국전력 등을 포함할 것과 대상품목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상의 원산지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제4차 협의에서 우리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타결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양국은 양허대상기관을 우리측의 한국통신과 캐나다측의 89개 연방정부기관으로하고, 적용대상품목은 연간 구매액이 13만 SDR(약 2억 2,000만원) 이상인 통신장비와 그 부속서비스로 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달원칙과 조달절차, 이의신청절차는 WTO정부조달협정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의 타결로 앞으로 우리나라 통신장비 공급업체들은 외국기업으로는 최초로 캐나다 연방정부의 통신장비구매 입찰에 캐나다 기업과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통신에 대한 캐나다 기업의 통신장비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